

<박사학위논문 소개>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 영향요인 분석 : 가구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lder Adults' Intention to Age in Place:
A Comparative Analysis by Household Type

저 자: 신 명 속 (Shin, Myung-Sook)**

지도교수: 우 아 영 (Woo, Ayoung)***

한국 사회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에 이르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통계청, 2025). 이는 2018년 고령사회(14%) 진입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경험한 인구 변동을 압축적으로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와 노년부양비의 가파른 상승을 수반하며, 기존 사회보장 및 주거복지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 지진(Age-quake)'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주택·복지·보건·도시정책 전반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자 가구구조의 변화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시킨다. 고령자 가구의 변화는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전통적 가족 부양 체계의 해체와 재구성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노인 부양은 자녀와의 동거를 전제로 하는 가족 중심 체계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노년기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고령자 가구 형태는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다.

최근 「장래가구추계」와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수는 2017년 약 399만 가구에서 2047년 약 1,100만 가구 이상으로 2배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

한 양적 팽창과 동시에 가구 구조의 질적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고령자 부양의 핵심이었던 '자녀 동거 가구(3세대 이상 포함)' 비율은 2017년 30%대 초반에서 2020년대 들어 20% 안팎으로 하락했으며, 장래에는 10%대 수준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산업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자녀의 동거·부양을 전제한 사적 돌봄 체계가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자녀와의 동거는 더 이상 고령자의 대표적 주거 형태가 아니라,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 악화 등 특정 조건에서 선택되는 제한적 대안으로 남게 되었다. 노인 1인 가구는 소득·건강·사회관계망 측면에서 복합 취약성을 지니고, 노인부부가구는 주택 관리와 향후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으며, 자녀동거가구 또한 세대 간 사생활·독립성, 돌봄·부양 부담을 둘러싼 갈등을 내포하는 등 각 가구유형이 직면한 위험과 필요는 상이하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단순히 "가족과 함께 살 것인가, 시설로 이주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각 가구유형이 보유한 자원과 위험, 관계 구조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주와 돌봄을 조직하고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재규정하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 가구유형의 다변화와 지역 간 구조적 불균형이 맞물린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를 둘러싼 갈등과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해명함으로써, "누가(가구유형), 어

* 본 논문은 필자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신명속(2026),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 영향요인 분석: 가구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를 요약한 것이다.

** 한양대학교 부동산학 박사, lucky6m6@naver.com

*** 본 학회 정회원,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ayoungwoo@hanyang.ac.kr

디에서(지역유형), 어떤 조건 아래 머무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추상적 이념이 아닌, 가구·지역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주거·돌봄 및 도시·주거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는 가구유형과 거주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부부가구는 경제적 자원과 주거안정성, 주거 만족도가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강하게 작용한 반면, 노인 1인가구는 소득·자산 수준과 더불어 이웃 관계, 사회활동 참여 등 사회적 자본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에서는 가족 관계와 건강상태, 주택의 물리적 편의성이 중요하게 나타나, 세대 간 돌봄 구조와 주거공간 구성 방식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역별 분석에서는 수도권, 5대 광역시, 지방 사이에 결정요인의 구조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높은 주거비와 주택 점유형태(자가 여부), 주거 만족도,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 5대 광역시는 의료·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경우 주거환경 열악성과 안전성 인식이 지속거주 의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방에서는 생활권 거점시설 접근성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 결부되는 경향이 확인되어, 지역에서의 서비스·교류 기반이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의 실현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가 개인의 선호만으로 환원되기보다, 지역이 제공하는 주거 구조와 서비스 조건 속에서 ‘가능성’으로 구성되는 의 사임을 의미한다.

셋째, 가구유형×지역유형 상호작용 모형을 통해 동일한 가구유형이라도 지역 맥락에 따라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의 결정요인이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 자원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거주 의사에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지방의 노인 1인가구는 경제적 수준보다 교통·의료 접근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방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자녀 부양 의지와 고령자 본인의 건강악화가 시설 입소 고려와

맞물리면서,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와 시설로의 이주 의사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과 가구유형이 결합될 때 고령자의 주거 선택이 단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과 관계망, 자원 배분이 중첩된 결과임을 의미한다.

주요 시사점으로 첫째,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지원하는 정책은 ‘고령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노인부부·노인 1인·자녀동거 가구라는 가구유형별 특성과 수도권·광역시·지방의 공간적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 1인가구와 지방 거주 취약집단에서는 경제·건강·관계망의 복합 취약성이 비자발적 정주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거비 지원, 재가·지역사회 돌봄, 생활 인프라 접근성 개선을 결합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주거정책의 핵심 과제로 재정렬함으로써, 고령자가 선택에 기반하여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를 건강 조건을 포함한 엄격한 개념으로 측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지속거주 의사가 ‘선호’만이 아니라 ‘실현가능성’의 제약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가구유형과 거주지역이라는 이중 맥락을 결합하여 지역사회 지속거주 의사 결정 구조가 집단별로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고령자 주거·돌봄 정책이 취약집단 중심의 표적화와 지역 맥락을 반영한 차등 설계로 고도화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주제어: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 고령자, 가구유형, 노인실태조사,

Keyword : Aging in Place (AIP), Older Adults, Household Type, Survey of Older Koreans